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0년도 제40호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성적지상주의 및 스포츠 폭력 근절 방안 절실

“성적 위주 선수 평가 관행 깎는다...KFA 전 경기 데이터 제공”

“끊이지 않는 학교운동부 폭력...충북, 올해 11건 발생”

“2년여 간 제보 0건...허울 뿐인 경북 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칼럼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

“체육단체는 스포츠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끄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

▷ 대한체육회 100주년과 공정한 세상

“새로운 100년을 담아낼 수 있는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한국 스포츠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가치는 ‘공정’

▷ 故 최숙현법 후속 법안 본회의 통과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운영비 지원 근거 규정 마련’

‘2년 주기 체육지도자 윤리·인권교육’

‘스포츠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명단 공개’

‘체육인의 인적사항 및 징계이력 등의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성적 위주 선수 평가 관행 깬다” KFA, 고등축구 전 경기 데이터 영상 제공

대한축구협회(KFA)가 이달 24일까지 경남 창원군 스포츠파크에서 열리는 2020 전국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에 참가하는 64개 팀에게 대회 전 경기의 분석 데이터 및 영상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KFA는 "고등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팀 성적 위주의 대학 입시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등리그 경기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고등리그에 참가하는 전국 21개 권역, 약 150개 팀에게 경기 분석 데이터와 영상을 제공해왔으며 고등리그 왕중왕전에서도 참가 팀들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64개 팀 지도자와 선수는 개인 계정을 부여받게 되고, 해당 계정으로 경기 분석 시스템 플랫폼(PC/모바일)에 접근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경기 데이터는 경기 종료 후 24시간 이내로 서비스된다. 왕중왕전의 경우, 자기 팀뿐만 아니라 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팀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제공되는 데이터에는 경기를 4개 영역, 45개 세부 지표로 나눠 모든 플레이 상황을 분석한 결과가 담긴다. 또한 히트맵, 패스맵 등 시각화된 데이터도 각 상황의 영상과 함께 제공된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고등부 최강자를 가리는 이 대회에서 더욱 향상된 선수들의 경기력과 정상급 팀 간의 치열한 전술 싸움이 기대된다. 선수들은 자신의 플레이만을 모은 '볼터치 영상'을 제공받게 돼 경기 중 잘 된 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감독 및 코칭스태프는 해당 데이터를 활용한 전술 운용이 가능해졌다.

KFA는 "내년까지 2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고등리그 경기 분석 시스템을 수정 및 보완한 뒤 2022년 공식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팀 성적 위주로 선수를 평가하는 기존의 관행을 깨고, 개인 성적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수 선발 절차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끊이지 않는 학교운동부 폭력사건... 충북서 올해 11건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인권침해와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충북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와 지난해 각각 11건, 5건의 학생 운동선수의 인권침해와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를 보면 지도자 5건, 학생·지도자 2건, 학생 9건이다.

A고등학교에서는 지도자가 학생 선수를 폭행하고, 급여지원비·명절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 운동부에서는 학생들 간의 폭력 사건도 불거져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도 이뤄졌다.

B 초등학교에서도 지도자가 학생을 폭행해 해고됐다.

또 C 중학교의 지도자는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학생의 얼굴이 찢어졌다. 충북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지도자에게 출전정지 1년의 처분을 했다.

D 고등학교에서는 선배가 후배를 폭행해 가해 학생은 전학 조치하고, 피해 학생은 위클래스에서 심리상담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운동부를 정기점검하고, 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bwy@yna.co.kr



폭언, 폭행 불구 '왜 제보 안 했나' 허울 뿐인 경상북도 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

경상북도 체육회가 2년여 전부터 설치, 운영 중인 경북스포츠 인권센터에 단 한건의 제보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는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고(故) 최숙현 선수가 지난 6월 폭행·폭언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황병직)가 지난 10일 도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또 2021년 경북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육대회의 정상적인 추진 여부 및 체육회의 기형적인 조직체계 정비 등과 관련한 위원들의 지적과 주문이 이어졌다.

김대일 위원(안동)은 2년여 동안 도 체육회가 경북스포츠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단 한건의 제보도 없었다면서 인권침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와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 위원(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11월 5일부터 공포돼 시행되고 있다면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내실화하고, 공익 신고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형적인 조직 체계를 정상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처럼 도 체육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박태춘 위원(비례대표)에 이어 윤승오 위원(비례대표)은 23명의 체육회 직원 중 5급 이상 상위 직급이 10명, 실무 직원이 13명 등 기형적인 조직체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인건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수경 위원(성주)은 체육회 사무처장 공석과 결원이 7명에 이르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과감한 조직 개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2021년 전국체육대회와 관련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특히 윤창욱 위원(구미)은 1년 연기한 2021년 전국체육대회가 경북에서 열리지만, 향후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가 예측 불허인 점에 비추어 대회 운영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는 만큼 기존의 운영 방식이 아닌 비상상황에서의 대회 준비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논의하는 등 유연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체육회 감사에 앞서 진행된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장애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내실 있는 공익제보 시스템 확립, 성폭력 예방대책 강화, 장애 체육인 실업팀 확대 방안 등 인권 중심의 체육 조직 운영 및 장애 체육인 저변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 거론됐다.



변화하는 스포츠 환경과 체육계의 역할

스포츠는 우리에게 신체적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한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의 선전을 응원하며 모두가 하나가 되는 국민적 자긍심도 옅든다. 학생들은 스포츠 영웅을 보며 꿈을 키우기도 한다. 이처럼 스포츠는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가가 스포츠에 재정을 투입하는 이유다.

올해는 1920년 조선체육회가 결성돼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개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시기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잇따른 승전보는 고단했던 국민들에게 커다란 위안과 함께 자부심을 심어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승리지상주의에 매몰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 등 각종 폐해가 나타나게 됐다. 이에 더해 이제는 인구구조와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엘리트 스포츠 전반에서 선수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009년 8만7000명이던 초중고 운동선수는 2017년 5만7000명으로 34% 줄었다. 오로지 운동만 하는 구시대적인 엘리트 학교운동부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선수 양성이 어렵게 된 것이다. 여기에 일반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로 인한 스포츠 향유권에 대한 요구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포츠클럽과 같은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해 거기서 엘리트 선수가 발굴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엘리트 체육 일변도에서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혁신을 위해 52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권고안의 핵심은 그동안 인권침해 등 수많은 폐단을 야기했던 승리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스포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스포츠로 국민건강과 행복의 질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체육계 일각에서는 혁신위의 권고가 체육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과연 현장은 어떨까. 2011년부터 시작된 유소년 축구 주말리그의 경우 전국 800여개 팀이 평일 정규수업 후 훈련하고 주말에 리그 경기에 참가하는 형태로 정착됐다. 정부에서는 축구를 포함해 학생들의 주말리그 확산을 위해 올해도 9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7년 대학운동부 선수들에게 최저학력기준을 도입한 이후 대회 참가 불가 학생선수 비율이 71%였으나 2019년에는 18%로 대폭 낮아졌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 운동과 학업이 같아가야 한다는 현장의 인식은 혁신위의 권고 이전부터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체육단체들은 이제 스포츠 환경 변화에 거부감을 보일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돼야 한다. 정부 역시 체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권고한 정책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반면 국민통합과 경제발전의 동력, 남북교류 확산에 이바지했던 스포츠의 긍정적 에너지를 정작 국제 스포츠외교 무대에서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금 고민해야 할 시기다. 1960년대 대한체육회에 통합된 이후 유명무실해져버린 KOC의 기능을 '국제올림픽과 스포츠외교 전문기관'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 강국 위상에 걸맞게 스포츠 외교력을 강화하고 국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미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을 배출한 풍부한 인적자원이 있다. 이제 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역할을 발휘할 무대를 만들어주고 싶다.



대한체육회 100년과 공정한 세상

대한체육회는 올해 100주년을 맞았다. 1920년 7월13일 창립된 조선체육회를 모태로 한다. '건민(健民)'과 '신민(新民)'을 창립 이념으로 내세웠던 조선체육회는 1938년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가 해방 직후인 1945년 11월 부활했다. 정부 수립 이전인 1947년 6월 조선올림픽위원회(KOC)가 만들어져 1948년 런던 올림픽에 태극기를 앞세우고 참가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스포츠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엘리트 체육의 집중 육성과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통해 이른바 '국위 선양'이라는 시대적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대한체육회는 명실상부한 한국 체육의 본산이다. 엘리트 체육 육성을 책임지는 조직, 스포츠 외교를 담당하는 조직, 생활 체육을 관리하는 조직 등 다양한 체육단체들이 순차적으로 통합해 지금 같은 거대한 몸집이 됐다. 4천억 원의 연간 예산은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이 단체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할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18일에 열린다.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이 6~7명에 이른다. 선거 구도도 복잡하다. KOC 분리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이 있고, 엘리트 체육 우선주의와 생활 체육 중심주의가 나뉘어 보인다. 지난해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두고 이미 체육계는 심한 내분을 겪었다. 이번 선거는 그 연장선이다. 정치학에는 '정초(定礎)선거'란 용어가 있다. 미래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를 뜻한다. 대한민국 스포츠에 이번 선거는 정초선거가 되어야만 한다.

새로운 100년을 담아낼 수 있는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앞으로 한국 스포츠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가치는 '공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페어플레이도 공정에 속한다. 공정은 다양한 정책과 가치를 포괄할 수 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경색된 남북 관계를 돌파하고자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급하게 추진해 성사시켰다. 민족, 통일, 화해 같은 큰 명분이 있었다. 예전 같으면 온 국민의 환영과 박수를 받았을 법한 일이었다.

하지만 미래를 이끌고 나갈 젊은 세대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들은 이것을 불공정한 행위로 판단했다. 예기치 않은 단일팀 구성으로 지금까지 땀 흘려왔던 다른 개인이 희생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매우 상징적인 사례다. 공정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상을 읽는 핵심 열쇳말이 될 것이다. 치열한 토론과 공정한 선거를 통해 대한체육회가 혁신의 계기를 맞이하길 바란다. 스포츠가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한몫 해내는 것을 보고 싶다.



스포츠 비리 명단 공개... 故최숙현 관련법 국회 통과

앞으로 스포츠 비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체육계의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신고 관리 처리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대안)을 가결했다. 재석 257인 가운데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4인이다. 반대표는 국회 문체위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권표는 같은 당 배준영 한기호 의원 등이 던졌다.

대안법은 감독과 팀 닥터, 동료 선수들로부터 가혹행위 피해를 입다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개정안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박정, 임오경, 양경숙, 안민석, 이용, 이상헌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을 문체위원장 대안으로 병합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스포츠 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체육인의 인적사항, 수상정보, 경기실적 및 징계이력 등 세부 인적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하고 운영한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 처리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신고관리시스템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체육지도자의 윤리의식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2년마다 의무교육도 명시했다.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 및 지원활동 안내



체육시민연대는

‘철인3종선수 사망사건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스포츠인권팀’ 소속

10여분의 인권변호사분들과 함께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가 들어오면

초기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 아래의 이메일로 제보 바랍니다.

공동대책위원회

✉ forsportsreform@gmail.com

체육시민연대

✉ sports-cm@daum.net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www.sportscm.org/index.php?module=Inquiry&action=SiteInquiry&sMode=INSERT_FORM&iInquiryNo=2